

이용섭 시장 “광주 민간공항 이전, 10일 전까지 결정 발표”

광주 시민 뜻 존중하고 전남도와 상생 방안 고민 무안공항과 통합엔 ‘광주무안공항’ 명칭 바람직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는 10일 이전까지 광주 민간공항 이전·통합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민은 군 공항 이전을 배제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단독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와 무안군은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이 시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시민 뜻을 존중하면서도 (전남과의) 상생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남도와의 협약대로) 내년이 올긴다, 시민권위원회 제안에 따라 안 옮긴다는 등 단답형으로 답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의) 도심 군 공항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남으로 옮기고, 광주 민간공항은 전남 무안으로 통합해 경쟁력 있는 서남 관문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시민 뜻을 존중하고 전남도와 상생을 훼손하지 않는 (연립방정식의) X, Y, Z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민권위원회는 시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내년까지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정책 권고문을 이 시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여론조사에 참가한 시

민 중 79.5%는 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달 안에 권고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 시장은 오는 10일 전까지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할 경우 공항명칭으로는 ‘광주무안 공항’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전남도에 공문으로 통합 공항명칭으로 광주무안 공항을 제안했다”며 “통합 취지에도 맞고 무안 공항 이용자 대부분인

광주 시민 편의와 통합 공항 육성에 대한 광주시 자체적인 책임감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전남도에서 공항 명칭을 ‘무안광주 공항’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 “행정이라는 게 원칙과 질서가 있는데, 무안광주 공항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광주 무안 공항 42.8%, 무안 공항으로 유지 35.1%였지만 무안 광주 공항은 13.9%에 그쳐 검토 대상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류독감 예방 긴급 방역 최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영산강 인근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 돌파구 찾을까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참석 광주시·전남도 오늘 상생위 개최

수년째 헛바퀴를 돌며 지역 갈등을 불러온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최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해법을 마련해 도민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 오후 2시 전남도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참여 아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연다. 상생위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27개 협력 과제 중

한빛원전 안전 체계 구축, 무등산 권역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완료 처리하고 25개를 점검한다.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 발굴,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일자리 박람회 공동 개최 등 신규 과제 8건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다만 나주SRF발전소 현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문제 등은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여부 및 손실보상 방안 확정 문제는 정부(산업부), 나주시(발전소 인허가권자), 한국지역난방공사(운영사), 전남도, 시민대책위 등 5자가 참여한 민관거버넌스가 가장 중이라는 점에서 의제화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사·도는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 구체화된 이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지역 최대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상생위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 문제의 경우 상생위의 기존 협력 과제로서 최근 들어 갈등 구조를 풀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생위 개최 후 발표될 합의문에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에 관해 이전과는 다른 구조의 해법을 담은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참여해 지역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위는 2014년 10월 구성돼 협력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후에는 2018년 8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 SRF 새 협의체 구성 갈등 풀어야”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이하 민관거버넌스)가 최종 합의안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민관거버넌스 참여 4개 기관은 활동 종료 선언과 함께 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전남도 안팎에서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나주 SRF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 관련 소송을 통해 문제가 끝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민관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회의에는 지난 9월 말 탈퇴를 선언한 범대위(혁신도시 주민 측)를 제외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폐쇄 매물 비용 등 손실보전방안 마련 불발과 함께 민관거버넌스의 한 축인 혁신도시 시민대표 측의 거버넌스 탈퇴가 최종 합의안 도출 실패를 부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민관거버넌스는 같은 해 9월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도출해냈다. 1년 동안 ‘환경영향조사→손실보전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주민여론·공론조사)’를 거쳐 SRF발전소 운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으나, 손실보전방안 마련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애초 9월에서 11월 말로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협의 기한을 연장했으니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발전소 운영사인 한남 측은 시설 매몰비용 등 8000억원을 손실액으로 지속해서 주장한 반면, 다른 참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못했고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체사업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민관거버넌스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환경영향조사를 마치고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애초 계획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민관거버넌스 참여 4개 기관은 활동 종료 선언과 함께 이날 나주 SRF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확대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총리실, 환경부 등 SRF 관련 부처 및 조정을 위한 정부 기관까지 확대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갈등을 풀어보자는 제안이다.

한편 한남 측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나주 SRF 발전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하지 않고 당분간 광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의회 조례 2건,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조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우수 사례 조례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경제,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우수사례 중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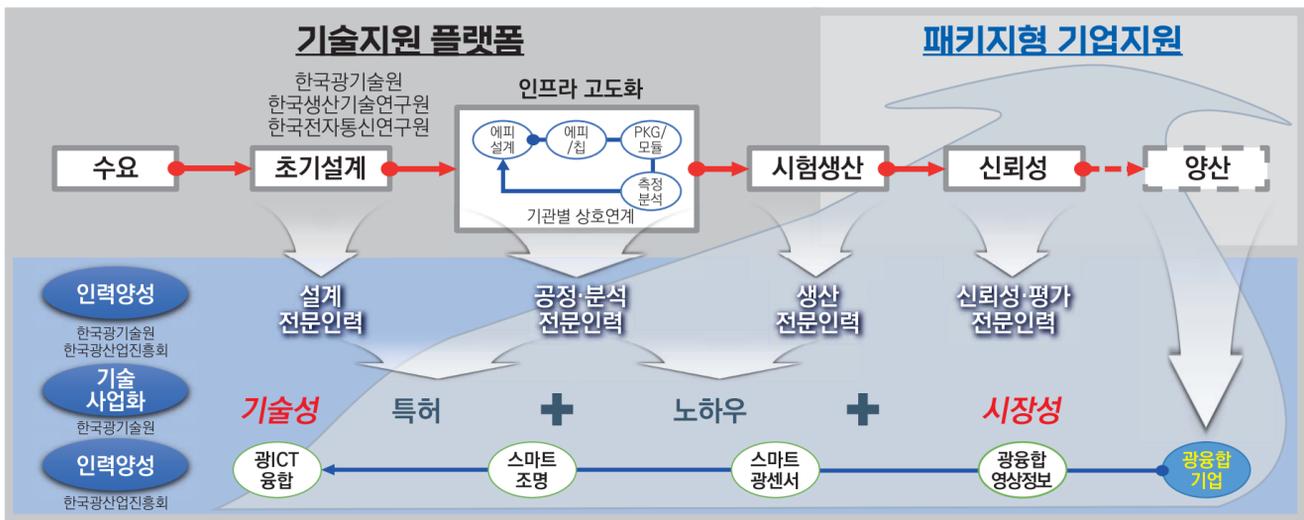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발표는 오는 12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융합기업의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광융합 전문기업 육성!!!

신시장 선도형 광융합제품 개발 대응으로 광융합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역량 확보하여 산업간 융합 촉진으로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은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상호 연계하여 기술지원, 패키지형 기업지원, 광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상기 기업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광기술원 062-605-914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62-600-652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62-970-6599 | 한국광산업진흥회 062-905-6633

광융합기술향상 장비연계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한 실제 장비운영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후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광융합산업 관련 종사자대상
- 교육운영 : 각 2일 과정(1일차 이론교육, 2일차 실습교육)

회차	시기	교육명
1	11.09 ~ 10	광디바이스 파장 특성 분석을 위한 장비 활용 교육
2	11.17 ~ 18	광학렌즈구조설계 기술
3	12.02 ~ 03	LED칩 측정 기술

※ 문의 : 한국광기술원 062-605-9298

광융합산업 혁신기관 인프라 공동활용 종합정보망

실시간 장비 활용, 신뢰성 지원, 기술 지도, 장비 연계 교육 신청 등 광융합 관련 기업대상으로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광융합산업 혁신기관 인프라 공동활용 종합정보망
www.photonicsinfra.org